

## 【서 평】

###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 南義鉉 著, 2008, 강원대학교 출판부 -

姜元默\*

## I

요동<sup>1)</sup> 지역에 관한 연구는 이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함의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지역에 관한 관심은 러시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이미 18세기 초엽부터 싹트기 시작했으며, 특히 19세기 중·후반부터는 정치적인 요인과 맞물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중국도 이러한 제국주의 열강의 관심에 대항하여 자체적인 연구를 본격화 하였다.<sup>2)</sup>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 1) 저자는 '요동'이라는 용어를 '요동도사가 형식적으로 관할했던 지역'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누르간 도사 지역까지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만주(滿洲)' 혹은 중국 측에서 사용하는 '동북(東北)'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지역 범위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요동 지역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의 경우 18세기 초엽 동방 정교회 선교사가 북경으로 파송되는 시점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19세기 카잔 대학,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滿洲學' 기반이 되었다. 이후 러·일 전쟁 패배와 소련 정권의 수립으로 인해 만주 연구의 중심은 일본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일본 역시 이미 에도(江戶) 막부(幕府) 말기부터 일부 학자들에 의해 요동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고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만선사(滿鮮史)'의 출현과 더불어 그 경향은 더욱 본격화 되고 있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이러한 제국주의 열강의 연구에 대한 대응으로 청말부터 동북 지역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다(李弘植, 『書評: 和田清 著, 1998, 『東亞史研究』(滿洲篇)』, 『亞細亞研究』2-1 251쪽 ; 金毓黻 撰, 『東北通史』上, 重庆五十年代出版社, 1~3쪽 ; 2003, 『中國史學史』商務印書館 355~357쪽 ; 黃定天, 1996, 『論俄國的滿學研究』『滿語研究』1996-2 119~120쪽 黃定天, 2000, 『蘇聯的滿學研究』『滿語研究』2000-2 97~98쪽. 미국학계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기훈, 2001, 『滿洲國』史 研究의 國際的 動向』『中國史研究』16 362~370쪽 참조.

1980년대 이 지역은 또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 북한을 의식하여 함구(緘口)했던 중국 측 동북 변경 관련 논의가 개혁·개방의 분위기로 인해 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다.<sup>3)</sup> 이처럼 요동 지역은 동북아 역사 연구의 ‘발칸 반도’로, 2002년 2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표면화와 이로 인한 ‘역사 대전(大戰)’의 발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요동 지역의 이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출간된, 남의현의 『명대요동지배정책연구』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중국사 연구자로서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는, 과거 요동을 관찰했던 국가들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중심에는 주로 한국사 연구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사 연구자들도 점차 요동 지역에 추파를 던지고 있다. ‘동아시아사’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시각의 다양화·객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서가 다루는 시기가 명대라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실, 명은 ‘중국’ 왕조로서 요동 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더욱 엄밀히 말하자면, 각각 사군(四郡)과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한 한(漢), 당(唐)의 이후로 처음이었다.<sup>4)</sup> 한편, 한반도 국가의 측면에서도, 조선 시대는 고조선 이래 어떤 시기보다도 요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적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한국 학계의 논의는 주로 고대사, 근대사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본서는 정면으로 승부하여, 명대 요동 지배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다.

3) 김춘선, 2002, 「鴨綠·豆滿江 국경 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 동향」 『韓國史學報』 12 ; 全海宗, 1990, 「東北(滿洲)史에 대한 中國에서의 研究」 『學術院論文集』 29의 「序論 - 研究의 興件과 概觀」 부분 참조.

4) 김한규, 2004, 『遼東史』 문학과학지성사 530쪽 및 「결론 - ‘요동사를 위하여’」 부분 참조.

저자가 문제시 하는 중국의 요동 관련 연구 동향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요동도사(遼東都司) 및 소속 25위(衛)의 형성이라는 제도사적인 측면에만 주목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둘째, 영락(永樂) 연간에 설치된 누르간 도사(奴兒干都司)에 대한 연구도 기존의 이해와 그 실질적인 내용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셋째, 조선과 여진에 관한 부분에서도 여진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축소하고, 또한 명대에 이미 ‘두만강~압록강 국경선’이 성립한 것인 양 서술하고 있다.

이 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동서 몽골·우랑하이(兀良哈 Uriyangkad)·여진의 위협이라는 외적인 요인과, 둔전(屯田) 생산량 감소, 인구 유출, 마정(馬政)의 문란 등과 같은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요동도사가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추적한다. 또한 그것이 명의 요동 지배 정책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명 초(영락 연간)까지 적극적이었던 요동 지배 정책이 명 중기(영락 이후)에 이르면 소극적·수세적인 입장으로 전환되고, 명 말에 이르면 이조차 어려워져 요동 방어선은 무너지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저자는 이와 같은 큰 틀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면서 문제의식과 연관한 몇 가지 주요한 서술들도 곁들이고 있다. 즉, 누르간 도사의 실체, 요동 변장의 국경선으로서의 성격, 요동 팔참 지역의 ‘국경 시대’로서의 성격, 여진을 둘러싼 조(朝)·명(明) 간의 구체적인 영향 관계 등이 그것이다.

## II

본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부 「요동도사 설치와 방어 체계 정비」 부분은 명이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먼저 외형적인 면에서, 명은 홍무 4년(1371) 요양(遼陽)에 요동위(遼東衛), 더 나아가 정료도위(定遼都尉)를 설치하고, 홍무 8년(1375)에는 요동도지휘사사로 변경한다. 그리고 홍무 20년(1387) 금산전투(金山戰鬪) 승리 이후에 요서(遼西) 지역까지 진출하여 25위의 설치를 완성한다. 내부적인 면에서, 물자 수급을 위해 둔전을 실시하는데, 식량 생산이 본격화 되는 것은 홍무 21년(1387) 이후이다. 이를 운반하기 위한 역참(驛站)·체운소(遞運所)·급체포(急遞鋪) 등이 설치되는 것도 그 즈음이었다. 홍무 30년(1397) 경 내부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물자 수급은 주로 산동 및 강남에 의존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홍무 6년(1373) 이후 지속된 고려에 대한 공로(貢路) 폐쇄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즉, 이 시기는 둔전·역참 등을 아직 정비하는 과정이었고, 또한 명은 인구 확보 및 몽골 방어에 필수적인 여진 조무를 고려[조선]가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제2부 「요동도사의 관할 범위 확대 시도와 좌절」에서는 영락 연간 명의 대외 팽창 정책을 다루고 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명이 '동북 통일의 대업'을 완성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 시기 요동 정책의 중심에 있던 누르간 도사의 경우, 우량하이 및 여진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기구였다기보다는, 사법·행정권도 불명확한 임시 기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것은 선덕(宣德) 연간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며, 그 이전까지도 군사·관리·군수 등의 면에서 요동도사의 하부 기관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우량하이 및 여진과의 지배-종속 관계도 증명될 수 없다. 한편, 영락제가 우량하이에게 펼

친 적극적인 회유책과 우량하이의 반응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우량하이  
는 명과 몽골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술을 구사한 것이며, 남하 과정을 통  
해서 볼 때 명보다는 오히려 몽골의 지배를 더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3부 「여진의 성장과 요동 방어 전략의 변화」에서는 영락 이후 수세적  
인 방어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시기 우량하이와 여진에 대  
한 명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한편 이들의 남하가 시작된다. 우량하이에 대  
해서는 2부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에서는 여진에 대한 논의가 주이다. 영락  
20년(1422) 경부터 남하한 여진은 정통 연간 혼강(渾江) 상류 쪽에 거주하며  
조·명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한다. 이 시기 명은 여진 뿐 아니라, 몽골, 우  
량하이 등의 침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요동 변장(邊  
牆) 수축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해 버린다. 저자는 이 요동 변장이  
야 말로 명의 지배력이 미친 한계선이며 이것은 일종의 국경선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명은 여진으로 인해 요동 팔참 지역에도  
역로(驛路)를 정비하고 성보(城堡)를 수축하는데, 이것 역시 소극적 방어 전  
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팔참 지역의 성보 수축으로 인해 이 지역  
이 좁아지기는 했지만 이곳은 여전히 조·명 양국의 ‘국경 지대’로서의 성  
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제4부 「명의 요동 팔참 점거와 국경 중립 지대」).

앞서, 방어 체제 전환의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제5부 「내  
정의 문란과 요동도사의 쇠퇴」에서는 내부적 요인을 다룬다. 영락 이후 나  
타난, 군관(軍官)과 부호(富豪)에 의한 둔전 및 둔군 은점(隱占), 둔군의 무리  
한 수군(守軍)으로의 편입, 과중한 부역(賦役), 고리대, 자연 재해, 변강 통치  
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 등은 둔전 생산량 및 인구의 감소를 야기하였다. 명  
후기가 되면 병변(兵變), 민변(民變) 등으로도 표출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방어선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가 결국 요동의 새로운 주인은  
여진이 되고 만다.

## III

이상이 본서가 담고 있는 대강의 내용이다. 이하에서는 문외한(門外漢)인 평자의 어쭙잡은 의견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본서는 요동도사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명의 요동 지배 정책을 살펴본다는 원래의 취지는 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서 좀 더 나아가 명의 변경(邊疆) 지배 정책이라는 차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동에 대한 정책은 서북·서남 방면 정책, 해방(海防)에 대한 입장과 별개일 수 없다. 또, 명의 지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요동 지역에서 명의 지배력이 약화되어 가는 과정은 사실 요동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갑제(里甲制)의 해체, 인구 이동 등과 같은 명 중기 이후의 사회 변화에 관한 논의는 이미 이루 매거(枚擧)하기 어렵다.<sup>5)</sup> 이것은 바로 명조 정부의 사회 통제력 이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명은 신사층(紳士層)이라는 우익(羽翼)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명의 요동 지배 정책은 이 같은 전체적인 구도를 안목에 두고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서의 주요 논지에 대한 의문이다. 관견(管見)의 한, 저자가 문제의식을 느낀 대상은 주로 중국 학계의 연구인 듯하다. 요동도사가 요동 지역 ‘전체’에 미친 지배력이 ‘실질적’이었고 또한 명 일대를 통해 ‘일관적’이었다는 논리는 주로 중국 측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이다. 반면, 1913년 일본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는, 명의 지배력이 요동도사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요동 팔참 지역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sup>6)</sup> 와다 세이(和田 清)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하며 연산관(連山關)에서 압록강 지역

5) 이와 연관된 논의들은 吳金成, 2007, 『國法과 社會慣行-明清時代 社會經濟史 研究-』 지식산업사의 제1편, 「제1장 明末·清初의 社會變化」 부분에 잘 정리되어 있다.

6) 稻葉吉岩, 1913, 「明代遼東의 邊疆」 『滿洲歷史地理』2 527~528쪽.

은 경태(景泰)·천순(天順) 연간부터 완전히 화외(化外)의 지역이 된다고 하였다.<sup>7)</sup> 타마라 지츠조우(田村實造)도 선덕(宣德) 이후 명조의 대외 정책을 퇴嬰적(退嬰的)이라고 강조하였다.<sup>8)</sup> 물론 당시 ‘滿鮮史’라는 정치 논리와 야합(野合) 가능성이 우려된다. 하지만 평자로서는, 이러한 유사한 논리에 대해서 본서가 조금이나마 언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럴 때에 본서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약간은 구체적인 면에서, 저자의 요동 인구 분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제5부에서는 『요동지(遼東志)』와 『전료지(全遼志)』의 인구 기록을 분석하여 명 중·후기의 인구 상황을 그려낸다. 『요동지』는 정통 8년(1443)에 처음으로 수찬(修撰), 홍치 원년(1488), 가정 8년(1529), 가정 16년(1537)에 차례로 중수(重修)되었고, 『전료지』는 가정 44년(1565)에 완성된 것이다. 일반적인 관행(慣行)으로, 지방지의 내용은 제일 마지막으로 중수되는 시점에서 수정된다. 물론 가끔은, 중수 과정에 내용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자이든 후자이든 간에 『요동지』와 『전료지』의 기록을 비교해서 각각 명 중기, 후기의 인구 수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전자의 경우라면 『요동지』에 실린 인구 수치는 가정 16년의 수치가 될 것이며, 후자라면, 정통 8년에서 가정 16년 사이 어떤 시기의 인구 수치인지 알 수가 없기에 그러하다.<sup>9)</sup>

한편 본서는 요동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명대는 객민(客民) 문제가 심각했던 일부 지역에 한해 일시적으로 ‘객민부적(客民附籍): 現住地附籍’을 허락했을 뿐, 전반적으로는 원적

7) 和田清, 1955, 「明末における鴨綠江方面の開拓」 『東亞史研究』(滿洲篇) 東洋文庫 503쪽.

8) 田村實造, 1963, 「明代の北邊防衛體制」 『明代滿蒙史研究』 京都大學文學部 74~75쪽.

9) 본서 335쪽과 343쪽에 각각 실린 표9와 표11은 공히 『요동지』로부터 추출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가정 연간’으로, 후자는 ‘명 중기’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발환주의(原籍發還主義: 原籍主義)를 고수하였다.<sup>10)</sup> 따라서 지방지의 인구 수치를 활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방지에서 인구 수치가 줄어든다고 요동 인구 감소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럼 둔전액(屯田額)은 왜 증가하는 것인가?<sup>11)</sup> 당시 지방 관부는 유입되는 인구를 파악할 여력도 없고, 파악하더라도 임의로 부적할 수는 없었다. 지방지의 인구 수치는 요동 전체 인구가 아닌, 재적(在籍)인구의 수치인 것이다. 오히려 당시 요동 지역은 인구 희소 지역[寬鄉]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었다.<sup>12)</sup>

저자는 90년대 초부터 꾸준히 명대 요동 지역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 분야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저자의 노력의 결실이며, 이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후학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평이라는 형식의 ‘압박’으로 평자의 우견(愚見) 몇 가지를 개진하였다. 혹이라도 저자의 의도를 곡해하는 바가 있다면 이것은 평자의 과문함과 무지의 소치이므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10) 萬曆 『大明會典』(1989, 楊州古籍書店) 卷19 戶部6 逃戶·流民; 吳金成, 1986, 『中國近世社會經濟史研究 - 明代紳士層의 形成과 社會經濟的 役割 -』 一潮閣 183쪽; 谷口規矩雄, 1965, 「明代中期荊襄地帶農民反亂の一面」 『研究』 35 204~206쪽; 楊國安, 2004, 「主客之間: 明代兩湖地區土著與流寓의 矛盾與衝突」 『中國農史』2004-1 86쪽; 陳寶良, 2005, 「明代社會流動性初探」 『安徽史學』2005-2 24쪽; 張建民, 1999, 「明代秦巴山區流民的附籍與分布」 『中南民族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67~68쪽.

11) 鄭炳喆, 1994, 「明末 山東과 遼東間의 교류와 그 성격」 『明清史研究』3 6쪽에서는 諸星健兒와 寺田隆信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요동 둔전액의 증가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즉, 영락 17년 21,171頃, 정통 초년 31,620頃, 정통 3년 39,520頃이 된다. 이것은 영락 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통 초년은 약 150%, 정통 3년은 약 187%가 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서의 저자 역시 동의하고 있다(328쪽의 주석 507 참조).

12) 鄭炳喆, 1994, 앞의 논문, 17~22쪽.